

비정규직,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남재량** · 김태기***

1990년대 중반 이후 비정규직의 급증은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본고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일자리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곳인지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한 이해는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정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에 속하는 사람들로써 낮은 직무능력과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서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함정일 가능성이 크다. 본고는 동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주로 함정으로 역할을 하며 가교로서의 역할은 미미하다.

— 주제어: 비정규직, 함정, 가교, 비자발적, 패널자료 —

투고일: 2000년 10월 18일, 심사일: 10월 20일, 심사완료일: 11월 29일

* 이 논문은 HON(Human Oriented Network)연구소와 2000년도 두뇌한국 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린다. 아울러 본 논문에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계약교수

*** 단국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I. 서 론

본고는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가교(bridge)로서 역할을 하는지 아니면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힘든 함정(trap)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규명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잘 알려져 있듯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오던 임시·일용직 종사자가 IMF체제로 표현되는 경제위기하에서 급속히 증가하여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임시·일용직으로 정의되는 비정규직 종사자 비중의 증가는 우리 나라 노동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특징이다.

비정규직 종사자가 증가하는 현상은 비단 우리 나라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관찰된다.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많은 나라들에서 비정규직은 주로 단시간(part-time) 근로의 문제로 요약되고 이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있다. 반면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 근로는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증가 속도가 빠르고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주요 외국의 경우와 구분된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는 비정규 근로의 구체적인 형태별 실태조사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어 머지 않아 우리 나라 비정규직의 특징들이 속속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우리 나라 비정규직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 가운데 하나이다. 밝혀내야 할 것들로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본고는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가교(bridge)일까 아니면 함정(trap)일까 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 근로는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근로 형태인가 아니면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함정인가의 문제이다. 가교인가 함정인가의 문제는 학문적인 관점에서 노동시장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만약 비정규직이 함정이라면 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수립 방향은 가교인 경우와 크게 달라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함정인지 가교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분석에 앞서 해결되어야 할 한 가지 문제는 비정규직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외국에서도 활발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외국과 달리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 외에도 비정규 근로의 형태가 매우 다양한 우리 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 문제를 직접 다루기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통용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여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임시·일용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그리고 상용근로자 또는 전일제(full-time)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파악하기로 한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구분은 통계청에서 근로계약 기간을 1차적인 기준으로 하고 근로조건(퇴직금, 상여금 등)을 부차적인 기준으로 하여 구분한 것이다. 단시간 근로와 전일제 근로는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한 구분이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이 가교인가 함정인가의 문제를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먼저 정태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 비정규 노동시장의 특징들을 살핍으로써 다음 단계의 연구에 필요한 실마리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동태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정태분석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분포에 대한 특징뿐 아니라 임시·일용근로자로 정의되는 비정규직과 단시간 근로로 정의되는 비정규직이 과연 동일한 집단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원해서, 즉 자발적으로 비정규 근로를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즉 비자발적으로(involuntary) 택한 것인지도 알아보기로 한다. 이러한 정태분석들은 우리 나라 비정규 노동시장의 정태적 특징들(stylized facts)을 알려준다는 추가적인 이득도 있다.

동태분석은 기본적으로 Markov 이행확률 모형과 경제활동인구 조사를 패널로 구축한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자료를 사용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이행확률 분석을 통해 비정규 노동시장의 동태적 모습을 파악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개인에 대한 장기 추적관찰을 실시함으로써 비정규직이 함정인가 가교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증거를 얻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다 다양하고 강력한 증거를 통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케 할 것이다.

본 연구가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며, 이들이 종사하는 분야도 낮은 직무능력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곳에 치중되어 있어서 비정규직이 함정일 가능성을 내비친다. 또한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위기와 더불어 급증하였고 이들 가운데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상승하고 있다. 이는 비정규직이 합정일 가능성을 한층 높임과 동시에 합정의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둘째, 비정규직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전전하는 대규모 근로자(群)군과 비정규직,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오가는 일단의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비정규직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80% 이상이 2년도 못 되어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 돌아온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더라도 이들 중 60% 이상은 2년도 안 되어 정규직에서 이탈된다. 정규직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는 전체 비정규직 종사자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나라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합정에 빠져 있으며 가교로서 비정규직의 역할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함을 알려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은 우리 나라 비정규직에 대해 정태분석을 한다. 이를 바탕으로 제Ⅲ장은 유량분석(flow analysis)과 비정규직 종사자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을 통해 비정규직이 합정인지 가교인지를 밝힌다. 제Ⅳ장은 이상의 분석을 요약하고 연구를 결론짓는다.

Ⅱ. 비정규 노동시장의 정태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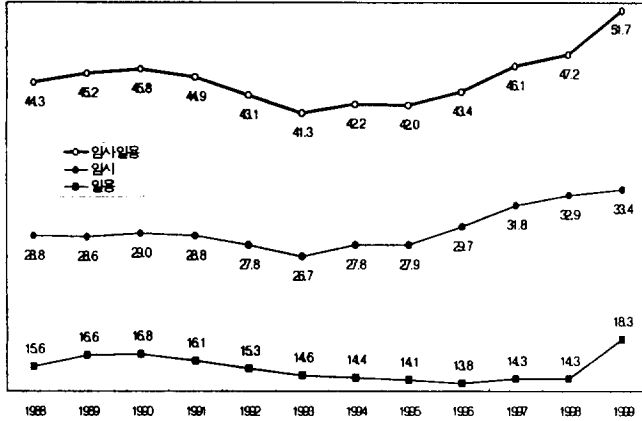
제Ⅱ장은 정태적인 측면에서 비정규 노동시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비정규직 종사자의 추이를 살펴보자.

1. 비정규직 종사자의 추이와 분포

우리 나라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임시·일용)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 및 그 변화를 [그림 1]에 제시하였다. 그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의 비중은 1993년의 41.3%를 고비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상승추세는 1996년부터 두드러지며 1997년에 2.7%포인트, 1999년에 4.5%포인트만큼이나 상승하여 1999년에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넘는 51.7%에 달한다.

이를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로 나누어 살펴보면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 변화는 임시

(그림 1) 비정규직 종사자의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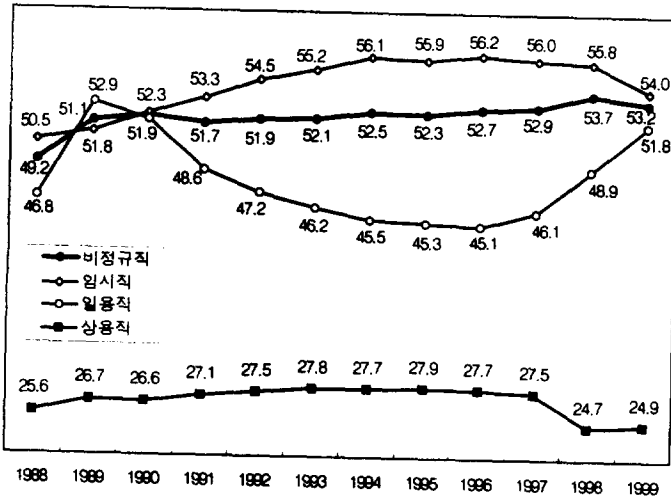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근로자의 비중 변화와 매우 흡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가운데 임시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일용직의 비중은 임시직과 달리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며 1999년에만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결국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 증가는 임시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진 데에 기인하며, 1999년의 급격한 상승은 일용근로자의 비중 상승에 크게 의존함을 알 수 있다.

이제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여러 속성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성별 분포를 보자. (그림 2)는 여성 근로자 비중을 종사상 지위별로 그린 것이다. 비정규직, 즉 임시·일용직의 여성 비율은 1989년에 50%를 넘어선 이후 미약하게 상승하고 있으나 대체로 52% 수준에서 안정되어 있으며 1998년에 53.7%로 높아졌다가 1999년에 53.2%로 다소 하락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이를 임시직과 일용직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임시직의 여성 비율은 1994년의 56.1%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한 후 1998년까지 56%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999년에 54.0%로 하락하지만 여전히 여성 비중이 가장 높다. 일용직의 여성 비율은 1989년에 52.9%로 크게 상승하였다가 1996년 45.1%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1997년부터 상승추세로 반전되어 1999년에 51.8%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임시직과 일용직의 여성 비중이 상반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들로 구성되는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그림 2〕 여성 근로자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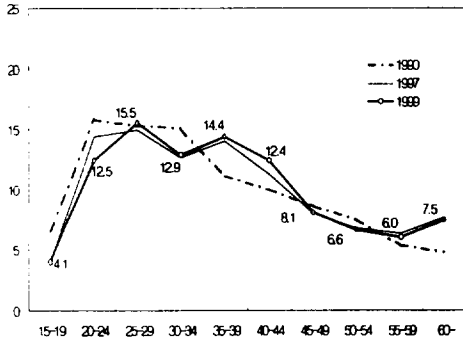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는 정도이므로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상용직의 여성 비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함을 고려한다면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상용직의 여성 비율은 1997년까지 27% 정도이며 1998~99년에는 25%에도 이르지 못해 비정규직 여성 비율의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비정규직의 여성 비율은 절대적인 수준으로만 본다면 높다고 보기 어려우나 정규직(상용직)과 비교해 본다면 정규직의 2배 정도로 매우 높다.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연령분포를 살펴보자. [그림 3]과 [그림 4]는 각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령분포와 그 변화를 그린 것이다. 두 그림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24세 이하 청소년의 비중이 높고 기간노동력(primary labor force)에 해당하는 25~44세의 비중이 낮은 반면, 55세 이상 노령노동력의 비중이 매우 높다. 1990년에서 1997년으로 그리고 다시 1999년으로 연령분포의 변화를 보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모두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의 60세 이상 연령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는 현상이 눈에 띈다. 이는 고령화에 따라 증가된 60세 이상 노령인구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흡수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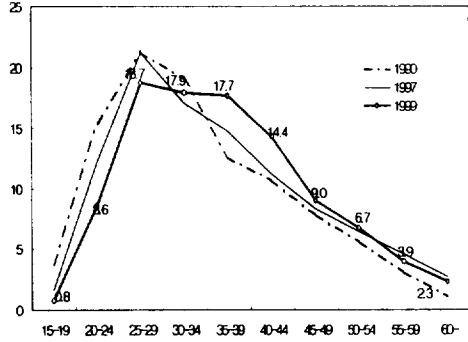
복잡함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임시직의 연령 구성은 대체로 상용직의 연령 구성과 유사하며 변화하는 모습도 닮은 반면, 고령자의 비중이 매우 높

(그림 3) 비정규직의 연령분포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4) 정규직의 연령분포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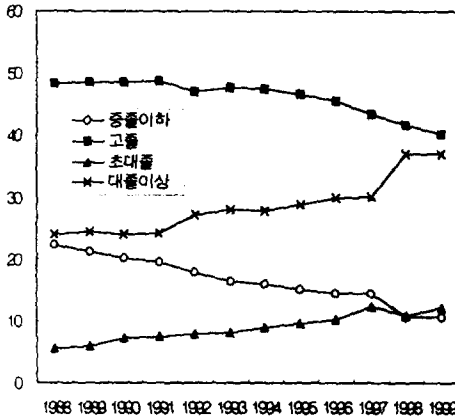
고 24세 이하 청소년의 비중도 높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일용근로자의 연령 구성은 임시직이나 상용직의 연령 구성과 크게 다르며, 5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지극히 높다는 점에서 상용직 또는 임시직과도 확연하게 구분된다.

결국 비정규직의 연령 구성은 정규직에 비해 55세 이상 노령인구 및 24세 이하 청소년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음의 (그림 5)와 (그림 6)은 각각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학력분포를 그린 것이다. 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졸 이하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초대졸과 대졸 이상자의 비중은 모두 증가하고 있어서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중졸 이하자의 비중이 모두 줄어들고는 있으나 비정규직에서 이들의 비중은 1990년대 말에도 35%에 이를 정도로 높은 반면 정규직의 경우 10%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대졸 이상자의 비중이 모두 증가하고는 있지만 비정규직에서 이들의 비중은 1990년대 말에 이르러서도 10% 남짓한 정도에 불과한 반면, 정규직에서는 37%를 넘는다. 고졸자의 비중은 비정규직에서는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에서는 감소하고 있어서 1997년에 이르러 비정규직의 고졸 비중이 정규직의 경우보다 더 높게 되었다. 1998~99년에 비정규직의 고졸 비중은 46.5%이고 정규직은 41%여서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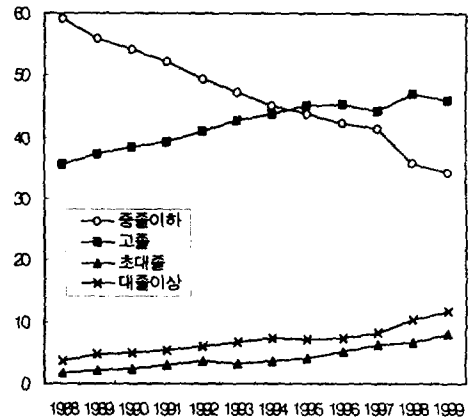
결국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학력분포에 있어 중졸 이하(또는 고졸 이하)의 저학력자 비중이 높고 초대졸 이상의 고학력자 비중이 낮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학력분포의 양극화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5) 비정규직의 학력분포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그림 6) 정규직의 학력분포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비정규직의 직종분포와 업종분포에 대해 살펴보자. 직종의 분포는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별로 뚜렷하게 구분된다. 별도의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겠으나 비정규직은 직종 9(단순 노무직 근로자)와 직종 7(기능원 및 관련 기능근로자) 및 직종 5(서비스근로자 및 상점과 시장판매 근로자)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비중이 서로 유사한 정도로 높다. 이들 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모두 합하면 70%를 넘는다. 이들 직종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직무능력이나 기능(skill)을 요구하는 직종들이다.

업종분포 역시 종사상의 지위별로 뚜렷이 구분된다. 정규직의 대부분은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시직은 주로 제조업과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에 집중되어 있다. 일용직 종사자의 업종 구성은 경제위기와 함께 급격하게 변하였다. 1993년부터 1997년에 이르기까지 일용직 종사자의 절반에 가까운 47~48%가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1998~99년에 급격히 하락하여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30%에도 이르지 못한다. 반면 제조업 종사자의 비중이 1999년 들어 상승하고 있어서 제조업 근로자의 임시직·일용직화 현상이 나타난다.¹⁾

이상과 같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한 정태적인 분석결과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

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97년에는 1.1%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에 5.1%, 1999년에 10.1%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근로의 급격한 확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들(facts)을 알려준다. 첫째, 임시·일용직으로 정의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여성, 고령자, 청소년, 저학력자 등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무능력이나 기능(skill)을 요구하는 분야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나라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며 낮은 직무능력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함정(trap)으로서 비정규직의 가능성을 조심스레 제기하게끔 한다.

2. 단시간 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이제 근로계약 기간이 아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정의한 단시간 근로, 즉 평소 1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로서 비정규직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근로계약 기간으로 구분한 비정규직 종사자와 근로시간으로 구분한 비정규직 종사자를 동일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이를 통해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기준이 상이함에 따른 차이를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종사상의 지위 외에 근로시간도 조사하므로 이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부록의 <부표 1>은 평소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시간 근로자는 1988년의 78만 명에서 1999년의 15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7년에 이르기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1993~96년 동안 이들의 비중은 4.5%에서 변하지 않고 있다. 1998년 들어 이들의 비중이 6.5%로 크게 증가하였고 1999년에 더욱 증가하여 7.8%에 이른다. 이에 비해 임시·일용직으로 정의한 비정규직 종사자가 취업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분석기간 동안 25%를 상회하며 1999년에는 30%를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는 임시·일용직에 비해 규모가 매우 작다.

임시·일용근로는 임금근로에 국한되어 있는 반면, 단시간 근로는 비임금근로까지 포함하므로 이를 구분하여 살펴보자. 부표에서 보듯이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88년에 26.2%에 불과하며 비임금 근로자가 73.8%를 차지한다. 그러나 이후 임금근로의 비중이 급증하여 1993~94년에 50%를 넘는다. 이 비중은 1995~97년에 다시 50% 이하로 하락하였다가 경제위기가 본격적으로 파급된 1998년에 56.0%로 크게 상승한 후 1999년에 54.1%로 다소 하락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자.

먼저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1989년부터 25%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다가 1998년에 30%를 초과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다. 이로 인해 임시·일용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의 절반을 넘게 되었다. 임시 근로자의 비중은 1994년까지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5년에 크게 하락한 후 1998년까지 상승하고 있으며 1999년에는 다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로 정의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전반적으로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그 정도나 구성은 시대나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비임금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영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비중의 변화도 급격하다. 1988년에 단시간 근로자의 40% 이상을 차지한 자영자의 비중은 이후 1994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1995년에 급격히 상승하고 1997년까지 안정된 모습을 보인 다음 1998년에는 크게 하락하고 1999년에 또 다시 상승하고 있다. 한편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1988년에 매우 높아 단시간 근로자의 30.2%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9년에는 12.0%에 불과하다.

이처럼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임금 근로자 비중의 변화가 경제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임금 근로자의 일부인 임시·일용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들 두 집단은 과거에 비해 보다 유사하게 되고 있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 '단시간 임금 근로자' 중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이 1989년 이후 91%를 넘고 있으며, 1998~99년에 95%에 육박하고 있음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단시간 임금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임시·일용 근로자임을 알려준다.

3.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이제 단시간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이유가 주로 비자발적(involuntary)인 데에 기인하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이를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근로(part-time work)와 전일제 근로(full-time work)에 대한 유보임금과 시장 임금 자료(data)가 필요하나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이에 대해 조사하고 있지 않다. 다만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평소 1주간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고 있는데 응답항목 가운데 '일거리가 없어서'라는 항목이 있다.²⁾ 이 항목에 응답한 사람들은 조사 당시 임금수준에서 더 일할 의사가 있지만 일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6시간 미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가 비자발적(involuntary)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³⁾⁴⁾

〈표 1〉은 단시간 근로자와 이들 가운데 '일거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36시간 미만 일하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수와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1988년부터 1997년까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평균 20.8%이며 이 수준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음을 표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위기가 파급되던 1998년에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29.5%포인트 상승한 51.5%이다. 1999년에 다소 하락하여 49.7%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경제위기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위험 수준으로 높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임시·일용 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두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므로 '핵심(core)' 비정규 근로자로 불릴 만하다. 이들의 비자발성 여부를 알아보자. 〈표 2〉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를 종사상

- 2) 연도별로 응답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1999년 응답항목은 '1.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 미만', '2.건강', '3.육아', '4.가사', '5.통학', '6.본인이 원해서', '7.일거리가 없어서', '8.기타'의 여덟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6.본인이 원해서'라는 항목은 1998년부터 추가되었으며, 이전에 있던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항목은 삭제되었다.
- 3) "전일제(full-time) 근로에 대한 유보임금이 제시임금(offered wage)보다 높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를 하지 않고 단시간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자발적(voluntary) 단시간 근로자이다"라는 지적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의 제시임금 수준에서는 '일거리'가 있어도 36시간 이상 일할 이유가 없으므로 '일거리가 없어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 게다가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가 없어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한다면 이들은 전일제 근로의 임금수준이 아니라 단시간 근로의 임금수준에서 36시간 이상 일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낮은 임금에서 더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보다 높은 임금이 지급되는 36시간 이상 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들은 기꺼이 그러한 근로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일거리가 없어서' 평소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이 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것은 비자발적(involuntary)이다. 더욱이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에 대한 유보임금이 제시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큰 육아, 통학, 가사, 건강 등의 이유로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36시간 미만 일하는 사람들과 응답항목에 있어 서로 배타적(mutually exclusive)이다.
- 4) 36시간 미만 일하는 이유 가운데 '현재 36시간 이상 전일제 근로의 임금수준에서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라는 응답항목이 있다면 이는 명백히 비자발적 비정규근로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답항목은 없으며 이에 가장 근접한 것이 '일거리가 없어서'이다. 이러한 분석이 엄밀하지는 않으나 비정규근로가 함정일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본 연구에 중요하다.

〈표 1〉 단시간 근로의 비자발성

(단위 : 천명,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단시간 근로자	780	890	826	860	889	860	887	919	935	1,057	1,303	1,578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172	184	169	174	183	185	191	191	177	233	670	784
비율	22.1	20.7	20.5	20.2	20.6	21.5	21.5	20.8	18.9	22.0	51.5	49.7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지위로 구분하여 그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 가운데 가장 비중이 높은 집단은 1997년까지 자영자이다. 자영자의 비중은 1988년 56.3%로 매우 높았으나 이후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8년에 32.5%까지 떨어졌다가 1999년에 35.2%로 다소 상승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용근로자의 비중은 1988년에 24.6%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 1998년의 39.4% 이후 비중이 가장 높다. 임시 근로자의 비중도 1988~89년의 7% 이하에서 1996년에 15.0%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12~15%에서 등락하고 있다. 이로 인

〈표 2〉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임금근로	상용	2.0	2.4	2.1	2.8	1.9	2.7	1.8	1.7	2.0	1.2	2.1	1.4
	임시	5.9	6.4	8.1	9.8	10.4	12.4	13.5	9.6	15.0	12.5	15.3	12.7
	일용	24.6	28.8	29.3	26.5	29.0	32.0	34.9	33.6	32.9	37.9	39.4	40.3
	임시·일용	30.5	35.2	37.4	36.3	39.4	44.4	48.4	43.2	47.9	50.4	54.7	53.0
비임금근로	고용주	1.4	1.7	1.5	1.0	2.1	2.4	1.6	2.2	2.4	3.0	2.8	2.2
	자영자	56.3	49.6	48.9	48.6	46.7	42.2	40.0	44.6	41.2	39.3	32.5	35.2
	무급가족	9.8	11.1	10.1	11.3	9.9	8.4	8.1	8.2	6.6	6.0	7.8	8.2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해 임시·일용 근로자의 비중은 1988년의 30.5%에서 1997년에 50.4%로 높아진 후 1998년 54.7%, 1999년 53.0%로 매우 높다.

이처럼 비자발적 비정규 근로자 가운데 핵심 비정규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은 비정규직이 함정일 가능성을 한층 높인다. 아울러 이들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서 함정으로서 비정규직의 기능이 확대·강화되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Ⅲ. 가교(bridge)인가 함정(trap)인가?

동태분석을 통해 비정규직이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얻었으므로 동태분석을 통해 이러한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자.

1. 모 형

동태분석에 사용할 모형은 기본적으로 Markov 이행확률 모형(Marston, 1976)이다. 노동력 상태는 크게 취업(E)과 실업(U), 그리고 비경제활동상태(N)로 구분된다. 비정규직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취업상태를 임금근로와 비임금근로(S , self-employed)로 나누고 다음 임금근로를 다시 정규직(T , typical)과 비정규직(A , abnormal)으로 구분하자. 그러면 이행확률 행렬은 (그림 7)과 같이 총 25개의 이행확률들로 구성된다. 그림에서 대문자는 이행자 수를 나타내며, 소문자는 이행확률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AT 는 $(t-1)$ 시점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던 근로자들(A_{t-1}) 가운데 t 시점에 정규직(T_t)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수이며, at 는 이들을 A_{t-1} 로 나눈 것으로 곧 이행확률이다.

이러한 이행확률들은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모습을 보여주므로 비정규직이 가교인지 함정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만약 비정규직 종사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은 일단 가교(bridge)로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그대로 머물거나 비정규직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전전한다면 비정규직은 함정(trap)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7) Markov 이행확률 행렬

		E_t			U_t	N_t
		T_t	A_t	S_t		
E_{t-1}	T_{t-1}	$TT(tt)$	$TA(ta)$	$TS(ts)$	$TU(tu)$	$TN(tn)$
	A_{t-1}	$AT(at)$	$AA(aa)$	$AS(as)$	$AU(au)$	$AN(an)$
	S_{t-1}	$ST(st)$	$SA(sa)$	$SS(ss)$	$SU(su)$	$SN(sn)$
U_{t-1}		$UT(ut)$	$UA(ua)$	$US(us)$	$UU(uu)$	$UN(un)$
N_{t-1}		$NT(nt)$	$NA(na)$	$NS(ns)$	$NU(nu)$	$NN(nn)$

2. 이행확률 분석

다음의 <표 3>은 경제활동인구 조사의 원자료를 패널로 구축한 남재량(1997)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구축한 패널자료로부터 구한 월별 이행확률들을 연도별로 평균하여 제시한 것이다. 비정규직의 정착도(aa)에서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자. 1993년에서 1999년 동안 aa 는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나 대체로 90% 남짓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규직의 정착도(tt) 97%나 비임금근로의 정착도(ss) 96%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빈번한 유출입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먼저 비정규직으로 유입에 대해 살펴보자.

비정규직으로 유입률은 실업상태에서 유입률(ua)이 15~2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이 비경제활동상태에서의 유입률(na)이다. 1993~97년까지 na 는 2.0% 수준에서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1998년에 2.2%, 그리고 1999년에 2.7%로 상승하고 있다. 유입률 na 가 이처럼 3%에 이르지도 못할 정도로 낮지만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인구규모가 크기 때문에 유입자 수(NA)는 가장 많다. 1993~97년 동안 NA 는 매월 평균 25만 명 정도이며 1998년에는 월평균 30만 명, 그리고 1999년에는 월평균 37만 명 정도이다.

비경제활동상태 다음으로 유입자 수가 많은 곳은 실업이다. 실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유입률(ua)은 1993년의 15.4%에서 1997년의 1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경제위기로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었던 1998년에 16.2%로 하락하고 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1999년에는 ua 가 19.5%로 크게 높아졌다. 실업상태에 있는 인구규모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률이 이처럼 높아 이행자 수 UA 는 1993~96년 7만 명 내외에서 1997년에 9만 명을 넘어서고 1998년에는 무려 22.6만 명, 1999년에는 25.7만 명으로 급증하

고 있다.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유입률(ta)은 1997년에 1.2%로서 이전의 0.9% 수준에 비해 상승하였고 1998년에 1.5%로 다시 높아졌으나 1999년에 0.7%로 하락하였다. 이행자 수(TA)는 1993~96년까지 5~6만 명 정도였으며 1997년에 8.4만 명, 1998년에 9.3만 명으로 높아졌다가 1999년에 4.2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비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으로 유입(sa)은 전반적으로 ta 와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1993년에 sa 는 1.2%였으나 이후 0.9%로 하락하여 1997년까지 계속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1998년 들어 1.3%로 높아졌으나 1999년에 1.2%로 약간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입자 수 SA 도 1994~97년 동안 7만 명에 다소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서 안정되어 있다가 1998년에 10만 명으로 증가하고 1999년에 9.2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으로 유입률은 실업과 비경제활동상태에서 가장 높고 유입자 수는 비경제활동상태가 압도적이며 그 다음이 실업이다. 정규직과 비임금근로에서 비정규직으로 진입하는 사람의 수도 1997년까지는 실업에서 유입한 사람들의 수와 유사한 규모이나 1998~99년에는 실업의 경우에 비해 훨씬 작다. 즉 비정규직으로 유입경로는 주로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이며 비임금근로와 정규직에서도 어느 정도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실업이나 비경제활동상태에서 벗어나는 확률들($ua, us, ut, un, na, ns, nt, nu$)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으로 벗어날 확률인 ua 와 na 가 가장 높다. 따라서 비정규직으로 주된 유입경로는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이며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에서 벗어나는 주된 탈출구 역시 비정규직임을 알 수 있다.

이제 비정규직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경우 주된 경로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표에서 보듯이 비정규직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출률(an)이 4~5%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유출자 수 AN 도 20~30만 명으로 압도적이다. 비경제활동상태가 아닌 다른 노동력 상태로 유출은 1997년 이전과 1998년 이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97년까지는 정규직, 비임금근로, 실업의 순으로 유출률이 높으며 이들간의 최대 격차가 1997년에 이르러 0.3% 포인트로 줄어들고 있다. 1998년 들어 이들 세 이행률이 모두 증가하고 있으나 au 가 3.7%로 크게 높아지고 as 가 1.9%로 상승한 반면 at 는 1.7%로 0.3%포인트 높아지는 데 그쳤다. 이로 인해 이들 세 이행률 간의 순서가 완전히 역전되었으며 그 격차도 크게 확대되었다. 1999년에 이 세 이행률들이 모두 감소하고 있으나 1998년의 순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에서 벗어날 경우 주된 탈출경로는 비경제활동상태이며 실업으로의 탈출확률(au)은 1997년까지 정규직이나 비임금근로로의 탈출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 차이는 적고 1998년 이후 비경제활동상태로 탈출(an) 다음으로 높다.

아울러 비정규직에서 비임금근로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수(AS)가 6~9만 명 정도 존재하며 비임금근로 상태를 벗어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비경제활동과 비정규직으로 옮겨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이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일부는 비임금근로와 비경제활동상태를 전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또 하나의 이행률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을 at이다.

〈표 3〉 이행자수 및 이행률

(단위 : 만명, %)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이행자수	이행률
at	9.0	1.9	7.8	1.6	7.9	1.5	8.4	1.5	8.2	1.4	9.5	1.7	6.8	1.1
aa	417.9	90.7	458.9	92.0	474.6	91.9	506.1	92.4	543.7	92.4	488.1	87.6	557.5	89.7
as	8.0	1.7	6.1	1.2	7.5	1.5	6.7	1.2	6.8	1.2	10.5	1.9	9.0	1.4
au	5.1	1.1	4.8	1.0	4.7	0.9	4.8	0.9	6.6	1.1	20.5	3.7	16.9	2.7
an	20.5	4.5	21.0	4.2	21.6	4.2	22.0	4.0	23.2	3.9	28.6	5.1	31.3	5.0
tt	641.2	97.7	670.6	98.0	700.0	97.8	699.8	97.8	679.2	97.6	605.8	96.5	575.0	97.9
ta	5.9	0.9	4.9	0.7	6.4	0.9	6.5	0.9	8.4	1.2	9.3	1.5	4.2	0.7
ts	2.9	0.4	2.1	0.3	2.5	0.4	2.4	0.3	1.8	0.3	2.8	0.4	1.9	0.3
tu	3.1	0.5	2.4	0.4	2.5	0.3	2.7	0.4	2.5	0.4	5.1	0.8	2.8	0.5
tn	3.6	0.5	3.9	0.6	4.1	0.6	4.2	0.6	3.9	0.6	4.9	0.8	3.6	0.6
st	3.1	0.4	1.8	0.2	1.6	0.2	1.7	0.2	1.3	0.2	2.0	0.3	1.3	0.2
sa	8.7	1.2	6.5	0.9	6.7	0.9	6.6	0.9	6.9	0.9	10.0	1.3	9.2	1.2
ss	703.3	96.0	712.9	96.6	725.3	96.7	733.9	96.8	747.2	96.9	723.4	95.1	730.6	95.8
su	1.6	0.2	1.3	0.2	1.2	0.2	1.3	0.2	1.5	0.2	4.5	0.6	3.2	0.4
sn	15.9	2.2	15.3	2.1	15.3	2.0	14.7	1.9	14.4	1.9	20.4	2.7	18.3	2.4
ut	2.9	5.6	2.8	6.0	2.6	6.5	2.4	6.0	2.1	4.1	2.4	1.7	2.9	2.2
ua	7.9	15.4	7.3	15.9	6.4	16.2	6.9	17.3	9.3	17.8	22.6	16.2	25.7	19.5
us	1.9	3.8	1.6	3.6	1.6	4.1	1.6	4.0	2.0	3.9	4.5	3.2	4.4	3.4
uu	35.8	69.6	31.7	69.2	26.6	67.1	26.8	67.1	34.6	66.7	94.7	67.7	83.9	63.7
un	2.9	5.6	2.4	5.3	2.4	6.1	2.2	5.6	3.9	7.5	15.6	11.2	14.8	11.2
nt	3.3	0.3	3.1	0.3	3.5	0.3	3.2	0.3	2.3	0.2	2.0	0.2	2.0	0.1
na	25.8	2.1	24.8	2.0	25.1	2.0	26.3	2.1	25.7	2.0	29.6	2.2	36.6	2.7
ns	17.6	1.5	14.8	1.2	15.4	1.2	15.3	1.2	15.1	1.2	19.6	1.5	20.4	1.5
nu	4.6	0.4	4.4	0.4	4.2	0.3	4.9	0.4	7.0	0.6	21.2	1.6	18.7	1.4
nn	1,150.2	95.7	1,168.4	96.1	1,188.8	96.1	1,212.1	96.1	1,222.5	96.1	1,275.4	94.6	1,290.5	94.3

자료 :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at는 분석기간 내내 2%에 미치지 못하며 1.4~1.9% 사이에서 등락하다가 1999년에 1.1%로 하락하고 있다. 이를 이행자 수(AN)로 보면 월평균 7~9만 명 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적어도 이들에게서 비정규직은 가교(bridge)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려준다.

이상의 이행확률 분석결과를 정리해 보자.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탈출할 경우 주된 경로는 비경제활동상태이며, 실업으로 벗어날 가능성도 경제위기와 함께 크게 높아졌다. 비정규직으로 유입은 주로 비경제활동상태와 실업으로부터 이루어진다. 이는 '비정규직 → 비경제활동, 실업 → 비정규직'이라는 일종의 폐쇄회로 속을 전전하는 거대한 근로자군이 존재할 것임을 알려준다. 아울러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옮겨다니는 일단의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동태적으로 보아 함정(trap)으로서의 기능이 강함을 알려준다. 반면 매월 7~9만 명 정도의 근로자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고 있어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가교(bridge)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3. 장기 추적관찰을 통한 분석

앞의 결과는 이웃한 두 시점(月)끼리 연결하여 구축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만으로도 정태분석으로는 알 수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시장의 동태적 특징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이 함정(trap)으로서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러한 증거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을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하여 이들의 노동력 상태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고가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최초 표본을 기본적으로 5년 동안 유지하므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이 가능하다.⁵⁾ 따라서 본고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노동력 상태 변화를 오랜 기간 동안 추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경제활동인구 조사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표본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패널을 구축할 경우 패널자료는 5년마다 단절된다.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표본 개편은 1998년 1월의 개편이므로 199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고 있는 본 연구에서

5) 이에 대해서는 남재량(1997), 남재량·류근관(2000)을 참조.

가장 오랫동안 동일한 개인을 추적할 수 있는 기간은 1998년 1월부터 1999년 12월까지이다.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이전의 기간은 1996년 1월부터 1997년 12월까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96년 1월과 1998년 1월에 비정규직에 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들을 2년 동안 추적 관찰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과연 합정인가에 대한 보다 분명한 증거를 얻고자 한다.

다음의 <표 4>는 1996년 1월과 1998년 1월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다가 다음 달인 2월(6)에 비정규직을 벗어난 근로자들의 이후 노동력 상태 변화를 각각 1997년 12월과 1999년 12월까지 추적하여 관찰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먼저 1996~97년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에서 떠난 40만 명 가운데 3개월 내에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온 사람들인 복귀자가 15만 명이어서 패널구축에 따른 표본 이탈자 3.9만 명을 제외한 잔류 표본 36.1만 명의 41.6%에 이른다. 이 복귀율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51.1%, 1년이 경과할 경우 68.0%, 그리고 마지막 22개월째에 이르면 80.7%에 이른다. 즉 22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시작 시점의 40만 명 가운데 10만여 명이 표본에서 이탈하여 잔류 표본이 약 30만 명인데 이 가운데 24만 명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복귀하여 80.7%의 복귀율을 보이는 것이다. 1998~99년에도 22개월 복귀율은 80.9%로서 1996~97년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다.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비정규직에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2년도 안 되어 80%를 넘을 정도로 높음을 알려준다.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의 복귀율은 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복귀율이나 비임금근로

<표 4> 비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복귀

(단위 : 명, %)

	1996~97				1998~99			
	잔류표본	복귀자	복귀율	표본 이탈자	잔류표본	복귀자	복귀율	표본 이탈자
시작시점	400,147	0	0	0	790,282	0	0	0
3개월	361,224	150,320	41.6	38,923	721,344	264,225	36.6	68,938
6개월	344,969	176,371	51.1	55,178	694,283	343,313	49.4	95,998
12개월	317,574	215,989	68.0	82,573	651,626	430,926	66.1	138,656
22개월	298,717	241,086	80.7	101,430	612,460	495,680	80.9	177,822

자료 :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6) 이를 또는 이와 유사하게 정의된 것을 '시작시점'이라 부르기로 하자.

에서 비임금근로로의 복귀율보다 높을까? 다음의 <표 5>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다. <표 5>를 보면 정규직에서 이탈한 사람 가운데 정규직으로 되돌아오는 사람은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잔류 표본의 25.5%, 6개월이 지날 경우 33.4%, 1년이 경과할 경우 41.9%, 그리고 2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55.4%에 불과하다. 이러한 복귀율은 1998~99년에 더욱 낮아져 22개월까지의 복귀율이 50%에도 이르지 못한다. 이는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이 비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매우 낮음을 알려준다.

비임금근로에서 벗어날 경우 비임금근로로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은 정규직의 경우보다는 높지만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미치지 못한다. 1996~97년의 경우를 보면 복귀율이 3개월에서 44.7%, 6개월에서 54.6%, 12개월에서 64.1%, 그리고 22개월에서 72.2%이다. 이러한 비임금근로 복귀율은 경제위기로 크게 영향받아 1998~99년에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즉 1998~99년의 3개월 복귀율은 33.0%로서 위기 이전의 44.7%에 비해 무려 11.7%포인트나 낮고 6개월 복귀율도 10.0%포인트 낮은 44.6%이다. 6개월 이후에는 복귀율이 상승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커서 22개월에 이르면 복귀율이 68.4%에 이르러 위기 이전의 72.2%에 가까워지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탈출자의 비정규직 복귀율은 2년 내에 80%를 넘으며 비임금근로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고 정규직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다. 이는 비정규직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표 5> 정규직과 비임금근로의 복귀

(단위 : 명, %)

		1996~97				1998~99			
		잔류표본	복귀자	복귀율	표본 이탈자	잔류표본	복귀자	복귀율	표본 이탈자
정규직	시작시점	140,181	0	0	0	294,000	0	0	0
	3개월	119,391	30,469	25.5	20,790	260,524	36,079	13.8	33,476
	6개월	110,645	36,902	33.4	29,536	239,817	52,547	21.9	54,183
	12개월	103,618	43,461	41.9	36,563	212,072	76,743	36.2	81,928
	22개월	88,437	49,010	55.4	51,744	184,587	91,374	49.5	109,412
비임금 근로	시작시점	188,737	0	0	0	336,639	0	0	0
	3개월	174,863	78,245	44.7	13,875	317,091	104,694	33.0	19,548
	6개월	168,085	91,717	54.6	20,652	298,104	133,033	44.6	38,535
	12개월	159,108	102,049	64.1	29,630	275,653	153,530	55.7	60,986
	22개월	150,573	108,719	72.2	38,164	252,402	172,559	68.4	84,237

자료 :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 조사(통계청)

이 비정규직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머지 않아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결과이다. 이러한 비정규직 복귀율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외부충격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안정되어 있음도 알 수 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벗어났다가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 머물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표 6>에서 찾을 수 있다. 표는 1996년과 1998년의 1월에 비정규직에 있다가 2월에 비정규직에서 벗어나서 이후 22개월이 경과하기까지 비정규직으로 복귀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표본에 남아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 상태, 즉 1997년 12월과 1999년 12월의 노동력 상태를 정리한 것이다.

앞의 <표 4>에서 본 바와 같이 1996년 1월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다가 2월에 비정규직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40만 명이다. 이 가운데 1997년 12월까지 2년 동안 표본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표 6>에서 보듯이 5.8만 명이다. 이들 가운데 최종 관찰 시점인 1997년 12월에 비경제활동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2.3만 명으로 가장 많으며 40.6%를 차지한다. 그 다음이 30.3%를 차지하고 있는 비임금근로이다. 정규직과 실업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각각 27.8%와 1.3%이다. 이러한 결과는 1999년 12월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1999년에는 비경제활동상태와 정규직에 머무는 비율이 각각 35.1%와 19.4%로 1997년에 비해 크게 하락한 반면, 비임금근로가 30.3%에서 43.0%로 크게 상승하였다. 실업의 비율도 2.6%로 상승하였다.

1997년과 1999년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에서 이탈한 근로자가 비정규직으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비경제활동상태나 비임금근로에 남게 됨은 분명하다. 그리고 최종시점에서 정규직에 있게 되는 사람은 1999년에는 2.3만 명이며 1997년에는 1.6만 명에 불과하다.

<표 6> 비정규직으로 미복귀자의 최종 노동력 상태

(단위 : 명, %)

		전 체	정규직	비임금근로	실업	비경제활동
1997년 12월	근로자 수	57,631	16,030	17,461	733	23,407
	비율	100.0	27.8	30.3	1.3	40.6
1999년 12월	근로자 수	116,780	22,630	50,176	3,041	40,933
	비율	100.0	19.4	43.0	2.6	35.1

자료 :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한편 앞의 <표 3>에서 보았듯이 비정규직 종사자 가운데 다음 달에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사람(A7)의 수가 7~9만 명이었는데 이들은 이후에도 계속 정규직에 남아 있을까? <표 4>를 통해 비정규직에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비정규직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 이 질문은 앞의 이행확률을 통한 분석에서 비정규직이 가교로서의 역할도 일부 담당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갔다고 하더라도 머지 않아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거나 다른 곳으로 이탈한다면 이들에게서도 비정규직은 가교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먼저 비교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정규직에 머무는지를 살펴보자. 1996년 1월을 예로 들면 1월에 정규직에 있던 근로자들 가운데 다음 달에도 계속 정규직에 머무는 사람들의 비율인 정규직 정착률(tt)은 98%로서 확률로 표현하면 0.98이다. 여기에 Markov 안정성 가정을 하면 정규직에 머무는 기간은 51.1개월이다.⁷⁾ <표 3>에 있는 1996년 1년 동안 월평균 이행확률을 보면 tt 는 0.978로서 정규직에 머무는 기간은 Markov 안정성 가정을 할 경우 45.5개월이 된다. tt 가 0.965로 크게 하락한 1998년에도 이 기간은 28.6개월이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이러한 정도, 즉 1996년의 45개월과 1998년의 28개월 정도 정규직에 머문다면 이들에게서 비정규직은 가교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최대 24개월에 걸쳐 개인들을 추적할 수 있을 뿐이므로 45개월 또는 28개월 이상 정규직에 머물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없다. 기준을 크게 완화하여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 가운데, 이후 22개월 동안 계속 정규직에 머문다면 이들에게서 비정규직은 가교인 것으로 파악하기로 하자.

다음의 <표 7>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정규직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를 정리한 것이다. 표에서 1996~97년의 경우를 보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약 7만 명 가운데 이후 3개월 동안 계속 정규직으로 남아 있는 사람은 5.3만 명으로 잔류표본 대비 83.6%이다. 6개월 후에는 4.4만 명이 정규직에 그대로 남아 있으며 잔류율은 74.1%이다. 12개월까지 정규직에 남아 있는 사람은 2.5만 명으로 잔류율은 51.0%이며, 최종 시점인 22개월까지 계속 정규직에 머무는 사람은 1.4만 명으로서 잔류표본의

7) 이는 $1/(1-tt)$ 로 계산한 결과이다.

38.1%에 불과하다.⁸⁾ 1998~99년의 경우에도 22개월 후 잔류자는 1.9만 명으로서 잔류 표본의 36.9%이다. 달리 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이들 가운데 60% 이상이 2년도 채 못 되어 정규직에서 이탈하고 마는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표본이탈률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 가운데 22개월까지 정규직에 머무는 사람들은 1996~97년에 2.7만 명(38.1%), 1998~99년에 3.7만 명(36.9%)에 그친다. 이는 각각 비정규직을 떠난 40만 명과 79만 명의 6.7%와 4.7%에 해당하며 1996년 1월과 1998년 1월 비정규직 종사자 535.5만 명과 563.5만 명의 0.50%와 0.66%에 불과하다. 즉 가교의 역할을 하는 비정규직은 비정규직 종사자 100명 가운데 1명에도 못 미치는 0.5~0.7명에 불과하다.⁹⁾

〈표 7〉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간 사람들의 정규직 잔류

(단위 : 명, %)

	1996~97				1998~99			
	잔류표본	정규직 잔류자	잔류율	표본 이탈자	잔류표본	정규직 잔류자	잔류율	표본 이탈자
시작시점	69,839	69,839	100.0	0	101,641	101,641	100.0	0
3개월	63,679	53,210	83.6	6,160	94,816	73,693	77.7	6,825
6개월	59,807	44,339	74.1	10,032	87,751	55,999	63.8	13,890
12개월	48,741	24,834	51.0	21,099	71,775	37,991	52.9	29,866
22개월	36,543	13,921	38.1	33,296	52,090	19,241	36.9	49,551

자료 : 경제활동패널(남재량, 1997). 원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근로자들에게 합정인지 아니면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가교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 8) 김대일·남재량·류근관(2000)에서 정규직의 표본이탈률이 비정규직보다 낮다는 결과를 생각한다면 잔류율 38.1%는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9)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가 정규직으로 진입하여 오랫동안 머무으로써 정규직에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비정규직이 가교라기보다는 비정규직에서 옮겨간 다른 노동력 상태가 가교일 것이다.

정태적인 측면과 동태적인 측면에서 우리 나라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대해 분석하였다.

정태적인 측면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우리 나라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이며 많은 비정규직이 낮은 직무능력이나 기능을 요구하는 분야에 치중되어 있어서 비정규직이 함정(trap)일 가능성이 있다. 둘째, 임시·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나 과거에 비해 유사하게 집단화되어 가고 있으며 임금근로자에 국한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대부분은 임시·일용근로자이다. 셋째,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위기 이전의 20% 수준에서 경제위기와 더불어 50%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또한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핵심 비정규직 종사자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사실들은 비정규직이 함정일 가능성을 더욱 높이며 함정의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보다 강해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게끔 한다.

함정으로서 비정규직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동태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비정규직 → 비경제활동, 실업 → 비정규직'이라는 폐쇄회로 속을 전전하는 대규모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비정규직과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상태를 오가는 일단의 근로자군이 존재할 가능성도 크다. 이러한 결과들은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이 주로 함정(trap)일 것이라는 정태분석 결과를 확인시켜 준다.

이러한 결과를 보다 분명하게 입증하여 줄 증거를 찾기 위해 동일한 개인을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장기 추적관찰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에서 다른 곳으로 탈출한다고 하더라도 2년 정도가 경과하는 동안 80% 이상이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규직의 50%에 비해 매우 높아 정규직에서 이탈된다면 다시 정규직으로 되돌아가기가 어려운 반면, 비정규직에서 벗어나더라도 대부분 다시 비정규직으로 되돌아오게 됨을 의미한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더라도 2년이 채 못되어 60% 이상이 정규직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는 정규직에 정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즉 가교(bridge)로서 비정규직이 전체 비정규직 종사자의 0.5~0.7% 정도로서 단 1%에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비정규직은 한번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함정(trap)으로서의 역할이 대부분이며 가교(bridge)로서의 기능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약하다는 것으로 본 연구를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일단 비정규직에 빠지면 그곳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대부분 비정규직과 실업 및 비경제활동 또는 비임금근로

를 옮겨다니게 되므로 비정규직 종사자 대부분의 노동시장 신분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는 한번 비정규직에 종사하게 되면 쉽게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이 골레가 되어 그곳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부표 1〉 단시간 근로와 종사상 지위

(단위 : 천명,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단시간 근로	총수	780	890	826	860	889	860	887	919	935	1,057	1,303	1,578	
	비율	4.6	5.1	4.6	4.6	4.7	4.5	4.5	4.5	4.5	5.0	6.5	7.8	
입 금 근 로 자	계	총수	204	345	353	389	419	437	458	424	443	505	730	854
		비율	26.2	38.8	42.8	45.2	47.2	50.8	51.6	46.1	47.3	47.8	56.0	54.1
	상용직	총수	23	28	23	29	28	37	38	36	35	28	38	46
		비율	2.9	3.2	2.8	3.4	3.2	4.3	4.3	3.9	3.7	2.6	2.9	2.9
	임시직	총수	55	89	114	147	176	182	203	165	185	213	287	301
		비율	7.0	10.0	13.8	17.1	19.8	21.2	22.9	18.0	19.8	20.2	22.0	19.1
	일용직	총수	127	228	217	213	215	217	217	223	223	264	405	506
비율		16.3	25.6	26.2	24.7	24.2	25.3	24.4	24.2	23.8	25.0	31.1	32.1	
임시·일용	총수	182	317	330	360	391	399	420	388	408	478	692	807	
	비율	23.3	35.6	40.0	41.8	44.0	46.5	47.3	42.2	43.6	45.2	53.1	51.2	
임시·일용 / 단시간입금근로		89.0	91.8	93.5	92.5	93.2	91.5	91.7	91.5	92.1	94.5	94.8	94.6	
비 입 금 근 로 자	계	총수	576	545	472	472	470	423	429	496	492	551	573	724
		비율	73.8	61.2	57.2	54.8	52.8	49.2	48.4	53.9	52.7	52.2	44.0	45.9
	고용주	총수	16	21	15	16	22	22	21	23	29	30	38	40
		비율	2.0	2.4	1.9	1.8	2.5	2.6	2.4	2.5	3.1	2.9	2.9	2.5
	자영자	총수	324	292	261	258	263	230	239	318	316	366	382	496
		비율	41.6	32.8	31.6	30.0	29.6	26.7	27.0	34.5	33.8	34.6	29.3	31.4
	무급가족	총수	236	231	196	197	185	171	169	155	147	155	154	189
비율		30.2	26.0	23.8	23.0	20.8	19.9	19.0	16.8	15.8	14.7	11.8	12.0	

주 : '단시간 근로'에서 '비율'은 취업자 전체에 대한 비율이고, '입금근로자'와 '비입금근로자'의 세부항목들에서 '비율'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비율임.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참 고 문 헌

- 김대일·남재량·류근관. 「한국노동패널 표본의 대표성과 패널조사 표본 이탈자의 특성 연구」. 『노동經濟論集』 23권 특별호 (2000. 2): 1-32.
- 남재량. 「우리나라의 失業率 趨勢變化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 학위논문. 1997. 8.
- 남재량·류근관. 「長期패널資料를 活用한 韓國의 失業期間 測定과 새로운 패널資料의 構築」. 『경제논집』 39권 2호 (2000. 6): 129-147.
- 최경수. 「단시간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7. 7.
- Marston, Stephen T., "Employment Instability and High Unemployment Rate."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 (1976): 169-203.

abstract

Abnormal Work, a Bridge or a Trap?

Jaeryang Nam and Taigi Kim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bnormal work practices', which have rapidly increased since the mid 1990s, are a 'bridge' for workers to 'normal work practices' or a 'trap' from which they are hard to escape. It provides both the static and dynamic analysis. The former shows they are likely to work as a 'trap'. The latter, which investigates the transition probability during the last 24 months, also supports the same result. It finds out that most of part-time workers paid by an employer are contingent workers or daily workers and that about fifty percent of 'abnormal workers' took them involuntarily.